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i>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i>			
보도 일시	2022. 11. 29.(화) 조간 2022. 11. 28.(월) 11:00	배포 일시	2022. 11. 28.(월) 06:00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책임자	과 장 신재영 (044-200-5300)
		담당자	사무관 신영락 (044-200-5301)

전국 해양쓰레기 담당자 한자리에 모여 해양쓰레기 저감방안 논의한다 - 해수부, 29~30일 부산에서 해양폐기물 관리정책 토론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29일부터 이틀간 부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양쓰레기 관련 정책공유를 위한 ‘해양폐기물 관리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2011년부터 개최된 해양폐기물 관리정책 토론회는 매년 50여 명의 지자체, 관계기관 해양쓰레기 담당자들이 모여 최신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기회를 제공해왔다. 그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 전국 연안으로 확대되고, ‘21년 ‘하천폐기물 저감 관계기관 협의회’가 구성되는 성과도 달성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 대면으로 개최되는 올해 토론회는 규모를 확대해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전국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2020년 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시행 이후 증가한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사업들의 효율적 시행방안과 사업성과 극대화, 기관 간 협력방안 등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또한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기술 개발 R&D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양폐기물 수거 통계 관리·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 시간도 갖는다.

마지막으로 2022년 해양쓰레기 저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지자체 정책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 충청남도는 UN 공공행정상

을 수상한 지역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을, 부산시에서는 해양쓰레기 저감 정책 개발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한 예방·재활용 활동 사례 등을 발표한다.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를 현대화하고 지역 교육센터 등을 통한 인식개선 활동을 벌인 태안군 사례와 태풍으로 발생한 폐초목, 토사를 퇴비로 재활용한 영덕군의 사례도 소개된다. 해양쓰레기 분야 일선 담당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와 해변 정화 활동도 예정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60% 저감과 해양 오염퇴적물 현존량 5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1~’30)’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에는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수거·운반체계 개선, 처리·재활용 촉진, 관리기반 강화 및 인식개선 등 ‘해양오염물질의 전(全)주기 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 시행 이후 해양쓰레기 관리예산은 ‘20년 1,078억 원에서 ‘22년 1,603억 원으로 크게 늘어(국비기준) 각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노력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쓰레기는 인류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이제는 해양만의 문제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다양한 기관 실무자와 전문가가 모인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더 현장감 있는 정책 아이디어와 협력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충청남도 우수사례(UN 공공행정상 수상) 참고 사진



참고 2 부산시 우수사례(연안정화활동) 사진



참고 3 태안군 우수사례(수거처리 현대화) 참고 사진



참고 4 영덕군 우수사례(해양폐기물 퇴비 활용) 참고 사진

